

헝가리-EU/IMF간 재정지원 협상 개시

1. EU, 헝가리의 EU법 위반 등으로 EU기금 지원 중단

□ EU는 헝가리의 EU법 위반에 대해 개선요구

- EU법 위반 여부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2011년 12월 30일 중앙은행법 개정,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 법관 은퇴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¹⁾
- EU/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이 절실히 필요한 헝가리가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를 양보하는 성의를 기대했으나, 헝가리 정부가 중앙은행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가 강경조치를 취함.
 - 헝가리 언론은 EU 집행위원회의 경고를 헝가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함.
-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안정성 보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및 IMF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동 법안 개선을 요구함.
- 헝가리는 2008년 11월부터 2년간 IMF의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을 지원 받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됨.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어 헝가리 경제가 다시 악화되자, 헝가리 정부는 2011년 12월 21일 또 다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함.
- EU/IMF의 구제금융 지원협상에서 렌(Olli Rehn) EU 재정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동 구제금융 지원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1) ①중앙은행법 개정(중앙은행의 독립성), ②법원과 감사의 은퇴연령 하향(70세→62세) 조정 조치, ③데이터 보호 옴부즈맨 폐지(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등을 포함한 법안.



□ EU는 회원국 최초로 헝가리에 대한 EU기금 지급중단 선언

- 2012년 1월 24일, EU 이사회가 헝가리 정부에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요구했으나 헝가리는 불응함. 이에 2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자 개선조치 미흡을 이유로 헝가리에 배정된 EU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약 29%에 해당하는 4억 9,500만 유로를 EU 회원국 최초로 지급 중단할 계획임.
 - 2007~13년 헝가리에 배정된 EU 결속기금은 총 253억 유로인데 이 중 2012~13년 배정 기금은 약 82억 유로 수준임(헝가리 GDP의 1.4%).
- 헝가리는 2004년 5월 EU에 가입이후 재정적자 상한선(GDP의 3%)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못했고, 특히 2009년 EU의 재정적자 개선요구 후 동 요구 준수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했음에도 위반함.
- 2011년 말 재정수지가 GDP의 4%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헝가리 재정은 민간 연금의 정부재정 강제편입과 같은 일회성 조치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GDP의 6% 정도의 적자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는 인프라 투자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EU 집행위원회의 EU 기금지급이 중단될 경우 헝가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수지 적자개선으로 EU 기금의 중단조치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금년 재정적자를 EU 기준치 이내로 억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3개월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EU의 대 헝가리 지원협상 재개 및 헝가리 정부의 대응책 발표

□ EU는 헝가리에 대해 EU기금 지원 협상 재개

- 4월 24일 오르반(Orban) 헝가리 총리와 바호주(Barroso) EU 집행위원장 간 회담에서 중앙은행법 개정에 대해, 헝가리는 EU가 제기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재개정하고 나머지 2개 법안은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에 합의함. 오르반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거시경제 안정에 직결되는 모든 사안에 관해 EU법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함.



- 또 헝가리 정부는 중앙은행법 개정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법관 은퇴연령 등은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EU 기금지원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는 명분이 작용함.
- 한편, EU 입장에서는 스페인 위기설, 프랑스 대선 이후 EU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논란 심화 등 EU 차원의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헝가리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개선대책 발표

- 2012년 4월 23일,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로 인한 EU기금의 지원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구조개혁 수정안(Széll Kálmán Plan 2.0)을 발표함.
 - 동 방안은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위기관리세²⁾ 시한만료(금년 말)에 따른 세수 부족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임.

<정부구조개혁 수정안(Széll Kálmán Plan 2.0)의 주요 내용>

- 2013년 2,670포린트(한화 1.34조 상당)의 신규 세입 확대를 목표로 5대 세금(금융거래세, 통신세, 에너지세 증액, 보험세, 농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
- 도로통행 요금체제 방식 변경: 기간제방식 → 이용횟수제(연간 150억 포린트의 증세 효과 기대)
- 과세정책 변경: 소득중심 → 소비중심(경제활성화 기대)
- 의약품 보조금(400억 포린트), 국영기업 보조금(200억 포린트), 부다페스트 교통공사 지원금(100억 포린트) 삭감

자료: 주헝가리대사관.

2) 헝가리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수확보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세로 2010년에 3년 기한으로 에너지, 통신, 대형유통 산업 분야에 도입함.



- 구조조정안이 세수 증대에 집중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통신세, 보험세 등의 신설로 관련 업계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경제성장률이 2012년에는 -0.3%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함.

<표> 주요기관별 2012년도 헝가리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 전망

단위: %

기관명	EU	헝가리중앙은행	IMF	OECD	EIU
경제성장률	-0.3	0.1	0.0	-0.6	-0.8
재정수지(GDP대비)	-2.5	-2.5	-3.5	-3.0	-2.7

자료: 주헝가리대사관, IMF 및 EIU.

【인턴 조성 미】